

광주, 국가-광주형 연계 빈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오늘부터 전국통합돌봄 본격 시행

국가 의료·요양 돌봄에 광주 생활밀착 서비스 더해 시너지 인력 306명 배치 완료...대상 제한없는 '보편적 돌봄' 실현

광주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돌봄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연계해 빈틈없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기사 19면

시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 306명의 전담·겸임 인력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 시(5명)와 5개 자치구(38명)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 인력

을 두어 시민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재택의료, 방문간호, 일상생활돌봄 등 지역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체계의 핵심은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이다.

국가 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원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평가해 자치구에 의뢰하고, 자치구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게 된다.

반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가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대상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 지원과 병원 동행,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13종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돌봄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경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으로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틈새는 광주다움 서비스로 즉시 보완하는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두 돌봄 체계를 중복과 누락 없이 연결해 촘촘한 지역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박정환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광주의 틈새 돌봄을 결합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인구 80만 동부권...통합시장 선거 '캐스팅보트'

▶1면서 계속 실제 강 예비후보는 "동부권을 가장 먼저 살려내 부강한 100만 도시로 만들어 내고 광역경제권을 성공시키겠다"며 △순천에 정원 100명 규모 통합 의과대학 설립 △순천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광양만·여수산단 무탄소 전력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남 동부본부 산업청사 격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앞서 김영록 예비후보는 '전남 동부권 6대 발전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광양·순천 일대 RE100 국가산단을 확대해 첨단 미래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동부권을 반도체, 이차전지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광양만권을 전 세계 AI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고기능·고용량 첨단 반도체(HBM·HBF) 양산·수출 기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인구가 80만 명이

서부권과 동부권에 각각 국립 의대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김영록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실무부서 간 협의를 정책협의체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단순한 방향 설정을 넘어 과제별 일정과 실행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중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조성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광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경제 전진 기지 육성'을 골자로 한 동부권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동부권에 집적된 국가산단, 철강 산업, 향만 물류, 우주 산업, 농생명 산업을 하나의 성장 구조로 묶고 글로벌 교육을 결합해 지역 산업과 인구를 동시에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수·광양항에 스마트 항만과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남부권 핵심 항만 경제권을 만들고, 여수 국가산단은 범용 화학 중심에서 정밀화학·수소화학·전환

경 화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광양과 순천을 중심으로 한 RE100 기반 첨단 소재 산업 벨트 육성, 순천의 정주 여건 강화, 고흥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 육성 등 지역별 발전 방향성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록은 "전남 동부권은 특정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지 않은 곳으로,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소외권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

오는 곳인 만큼 전남 동부권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해 보이며 후보들 또한 같은 생각에 동부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승부수 전문가 포럼서 평가 대응·발전 전략 집중 논의

도,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승부수

전문가 포럼서 평가 대응·발전 전략 집중 논의

전남도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평가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동시에 점검하며 지정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26일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문가 포럼'을 열고 특화단지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평가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경원 광양시 부시장, 관련 전문가와 기업,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양만권은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이다. 기초원료 생산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50여 개 관련 기업이 모여 있고, 112개사·5조3724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수요도 잠재해 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일원 2826만㎡ 부지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2조8452억원을 투입해 미래첨단국가산단 등 7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광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이 특화단지 신청 경과와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박현중 조선대학교 교수는 전고체전지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최중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K-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화단지 지정 전략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날 포럼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경원 광양시 부시장, 관련 전문가와 기업,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양만권은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이다. 기초원료 생산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50여 개 관련 기업이 모여 있고, 112개사·5조3724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수요도 잠재해 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일원 2826만㎡ 부지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2조8452억원을 투입해 미래첨단국가산단 등 7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광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이 특화단지 신청 경과와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박현중 조선대학교 교수는 전고체전지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최중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K-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화단지 지정 전략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靑 문화 교류·창조 중심도시 육성 등 문화관광 활성화 강화

광주시-조성위, 지맵 등 현장 살펴...문화전당교류권 발전방안 모색

광주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함께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약 4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조성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김원중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문체부 추진단, 광주시 문화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 현장점검 장소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미디어 라운지 등 주요 전시공간을 관람했다.

이어 양림동으로 자리를 옮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오엔기념각·오방 최홍중기념관·유진벨기념관 등 양림동 근대역사 자원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예술 거점을 차례로 답사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광주를 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조

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광주시는 5대 문화권별 특성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G.MAP, 양림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전당교류권은 문화·예술·미디어아트가 융합된 핵심 권역으로 꼽힌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폴리 프로젝트, 동명동 문화마을을 조성, 빛의 음성 아간경

관 조성 등 도심 활성화 사업과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구축, 양림동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김원중 조성위원장은 "문화전당교류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5대 문화권 간 연계를 강화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조성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광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나프타 쇼크'서 계속

△업계 불안감. 소비자까지 확산

업계의 불안한 상황은 소비자에게 불안감으로 전달되면서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수·화장지·비닐봉지 등 주요 생활용품이 적힌 '사재기 목록'을 공유하거나 매장별로 재고분을 공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특히 중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긴급 수급 관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제차 단가 급등과 가수요 폭발이 맞물리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이날 서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는 중량제 봉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마트 직원들은 봄비는 시민들에게 "중량제 봉투는 1인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시민 B씨는 "최근 별 생각 없이 집 근처 마트에 중량제 봉투를 구매하려 갔는데 요즘 봉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을 들었다"며 "지인 중 일부는 삼삼오오 그룹을 만들어 마트 곳곳을 다니며 봉투를 구하는 대로 나누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남광주 통합 실행계획 논의...18개 분야 과제 구체화

2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 점검...실무 협의 연계 속도전

전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분야별 과제를 세분화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상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논의하면서 통합 작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26일 도청 정약홍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분야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주요 통합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재정·행정서비스 등 18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앞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4일 두 시·도 부단체장과 주요 실국장이 참여하

는 제1차 행정통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대상 18개 분야를 확정했다. 양시·도는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 사안을 공식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실무부서 간 협의를 정책협의체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단순한 방향 설정을 넘어 과제별 일정과 실행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LTE-R 구축사업 본격 착수

122억 규모 철도통합무선망 구축...도시철도 안전 강화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사는 26일 본사 4층 상황실에서 '광

주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설치' 사업 착수보고회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총 122억 원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며 기존의 노후화된 무선 통신망을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기반의 철도 전용 무선망(LTE-R)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LTE-R이 구축되면 음성 위주의 기존 통신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 정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유지보수 데이터 등을 관제실과 기관사가 즉각 공유할 수 있어 도시철도 운영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시장이 26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주요 내빈들과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